▶ 전북도의회 도정 질의

"임란 웅치전투 승전으로 볼 수 있다"

박재완 "임진왜란 전적지 관리에 도가 나서야"
최영규 "도교육청 부서별 업무 중복 개선해야"
허남주 "파견공무원 민선 6기에 1.8배 증가, 퇴진 요구받아"
국주영은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하라"
김현철 "도의 인구대책이 기존 사업 재탕 · 임시방편 그쳐"

전북도의회는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도정과 도교육청 현안을 따져 물었다.

이날 도정 질의는 박재완(완주2), 최영규(익산4), 허남주(비례), 국주영은(전주9), 김현철(진안) 의원이 나섰다.

○ 박재완 의원 전북역사 문화자원 관리 활용에 대한 재조명 필요

박재완 의원

박 의원은 임진왜란 전적지의 관리와 활용과 관련, "도내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 중 이치와 웅치전투가 있다. 전주성으로 진입하는 왜군을 막고 향후 안덕원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는 결정적인 전투로 볼 수 있다"면서 "지금은 벌목허가로 헐벗었고 돌무덤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됐다. 해당 지자체인 진안군과 완주군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전북도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웅치전투가 승전으로 볼 수 있지만 다수 역사책에서 패전으로 기록돼 있다. 도가 나서서 왜곡된 부분에 대한 이미지 회복과 정정작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며 "우리지역 역사를 바로 잡는 작업이야말로 가장 먼저 이뤄야 할 일이다. 이런 작업 이후에는 성역화 작업까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영규 의원 전북도교육청의 부서별 업무중복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등 총체적인 조직 진단 촉구

최 의원은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타 부서와 중복되고, 특히 '옥상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행정조직에 적절한 조직 진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영규 의원

이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내 학생 안전관리 총괄을 위해 설치한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의 업무가 인성 건강과 업무와 일부 중복돼 행정 조직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

최 의원은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에 학생안전 총괄 컨트롤 타워를 두되, 실제 업무부서인 인성건강과와 협조로 안전문제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 민관협력 구축과 관련해 "민간 참여를 도모해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는 있으나 도교육청 행정 조직이 민간, 사회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면서 누리과정 등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행정을 주문했다.

○ 허남주 의원 전라북도 파견공무원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

허 의원에 따르면 민선 5기 37명이었던 파견공무원이 민선 6기에는 67명으로, 1.8배 증가했다.

허남주 의원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출연기관 파견이 32명에 이르는데, 이는 타 시·도의 파견제 현황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 4급 이상 11명의 파견공무원 또한 강제로 떠밀리 듯 파견 나가고 있어 명예롭지 못한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지에서 파견기관은 파견기관대로 파견공직자들의 성과나 직위를 만들어주기 위해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했다.

○ 국주영은 의원 '전라북도의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촉구

정보화 역기능이란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화로 인해 게임 중독, 청소년 이용불가 폭력·선정 게임, 사이버 음란물 등을 말한다.

국주영은 의원

국주영은 의원은 지금까지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책이 "자발성에 기초한 정보통신윤리교육과 전시성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며 "자발성에만 의존하기에는 게임중독 등의 폐해가 너무 크다. 이제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은 학교 안과 저소득층학생을 책임지고, 도청과 시·군청은 학교 밖에 대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에 도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현철 의원 전북도의 인구대책이 기존 사업 재탕이라고 꼬집어

김현철 의원

김 의원은 "최근 4~5년간 도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지만 전북도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안일한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송하진 지사가 당차게 밝힌 인구300만은 고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산양육과 일차지 창출, 주소지 이전 등 5개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하나같이 기존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고 도비지원 없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주소지 이전사업 등 시군 자체사업도 억지로 짜 맞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 7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하고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지게 된다는 전망이다"면서 "급격한 인구감소세를 저지할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일본 이시카와현의회 일한 방문단, 도의회 방문

일본 이시카와현의회 일한 우호촉진연맹 방문단이 13일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했다.

히모노 요시아키 의원 등 일행 8명은 이날 오후 전북 도의회를 방문해 황현 도의장 등을 만나 양 도·현의회 간 우호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현 도의장은 환영인사말에서 "이시카와현과 전북도는 상호우호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노하우를 공유하면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 의회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해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시카와현의회 일한 우호촉진연맹 방문단은 이날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전주한옥마을 등을 둘러봤다./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 악용 그만해야"

국민의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선거운동 악용은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전국 자원봉사센터 절반을 전·현직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어 선거운동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이어, 전북자원봉사센터도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안타깝다"며 "순수해야 할 자원봉사가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로 변질, 왜곡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현행법상 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운영을 허용한 규정을 일부 정치인들이 악용해 빚어진 잘못된 결과다"면서 "민선5기 때 6명이었던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민선6기 들어 13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전북도는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또 "신규 사업이나 업무 과다 등 적절한 사유 없이 직원들이 늘었다면 누가 봐도 "선거공신 자리챙겨주기용이 아니냐"는 시각은 합리적인 의심이다"며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완전한, 제대로 된 민간위탁 운영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신광영 기자

정운천 "전북을 농업용 로봇 · 드론 산업 메카로"

국회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을)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R&D 및 기술 관련 국정감사에서 농생명 인프라와 드론 전용공역 등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도를 농업용 로봇 및 드론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신산업의 경우 규제개혁과 동시에 우리 실정에 맞는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용 드론의 경우 다국간 FTA 체결 및 농가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현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북은 농·생명 인프라와 드론 전용공역(전주 완산구), 유망 드론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등 국내 유일 농기계 검정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소재하고 있다"며 "신산업은 집중 육성과 함께 융·복합을 통한 집적화를 만들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북을 농업용 로봇 및 드론의 메카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전북대표지청으로 지정해야"

전북경영자총협회 · 한국노총 "전북을 총괄하는 조직 필요"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13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전북대표지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형진 한국노총 전북본부장과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등은 이날 "현재 1본부, 6지방고용노동청, 40지청의 고용노동부의 조직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성에 맞게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전북대표지청으로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에는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과 남원·정읍 고용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고용노동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정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지 않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북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고 광주지방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고 많은 혼란과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전북지역 중심의 고용노동 네트워크(노사정) 구성에 필요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지역의 고용노동시장에 기초한 일자리정책, 발전적 노사관계 정책 등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표지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청의 소재지가 광역 자치단체일 것 ◢청장이 관할하는 소속 지청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포되어 있을 것 ◢대표지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청 소속 및 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수가 각각 4개소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들은 전주지청의 경우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며, 지청이 4개소 이상의 경우 남원과 정읍센터 중 한 곳을 출장소로 승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전주지청의 대표지청 지정을 위해 노동계와 경제단체가 선두에 서서 지역정치권,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